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4호

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장진호 의원 외 3명

제출연월일 2023. 2. 13.

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제4호
--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13.

대표발의자 : 장진호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민병춘
이태모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12조, 안 제23조)
- 나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정함(안 제28조 제4항 제9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
- 나. 기타사항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입법예고 : 2023. 2. 14. ~ 2. 18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영 제7조의2제1항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의3제1항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영 제7조의2제1항제3호”를 “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12조 제1항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7조를” “영 제7조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제27조”를 “제37조”로 한다.

제28조 제4항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농산물,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인 경우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장진호 의원 외 3명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은 논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<u>영 제7조의2제1항에</u>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 10조의3 제1항에 ---- ----- -----.
④ <u>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</u>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	④ <u>영 제 10조의3제1항제3호</u> ---- ----- ----- -----.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	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 및 <u>영 제7조에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23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23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37조----- -----.</p> 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농산물,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인 경우</u></p>
--	---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

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계산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0만 원을 말한다.

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

-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
-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(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)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.
-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